

#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, 사회적 책임

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

**지난해** 10월, 16개월 된 아기가 양부모에 의해 비참하게 짧은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. 이 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샀지만,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, 아동을 살릴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는 점이다.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현행법에 나타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대응 절차를 보면, 경찰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중 한쪽만 출동을 해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서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<sup>1)</sup>

최근 뉴스에서 연이어 보도된 이모부 조카 학대 사건, 인천 형제 화재 사건, 어린이 자녀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사건,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 학대 사건 등은 아동 학대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서, 현재 우리나라 아동 보호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.

연간 약 4,000~5,000명의 아동이 학대, 유기, 이혼, 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고 있으며, 매달 2.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<sup>2)</sup>.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신체 및 정서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<sup>3)</sup>.

1) 김아름·박은영·김재선(2017).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적 개선방안. 육아정책연구소, p. 11.

2)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(2019년 5월 23일 자).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-아동이 행복한 나라,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-, p. 4.

3)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(2020). 2020 코로나 19와 아동의 삶: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. p. 53, 61

**문재인 정부는** 그동안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. 2018년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하였으며, 2019년에는 이를 보편 수당 지급으로 확대하였다<sup>4)</sup>. 2019년 5월에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를 선포하고 「포용국가 아동정책」을 추진하였다.

「포용국가 아동정책」은 “아동이 행복한 나라”를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,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.

**UN아동권리협약**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. 따라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,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게 느끼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.

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<sup>5)</sup>에는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,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소득, 주거, 보호, 안전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.

이는 아동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‘권리주체’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,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.

**‘아동 최우선의 원칙’**이라는 패러다임 전환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투입과 인력지원 등 범국가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.

4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9. 9. 24일자).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. p. 3

5)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2020. 12).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일부 내용을 요약함.